

# 대학교육 정보 안내 76

21세기의 대학\*

Jürgen Rüttgers(저), 김병주(역)

## 목 차

1. 대학현황과 문제제기
  - 1) 세계의 변모
  - 2) 대학의 역할과 과제
  - 3)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점
    - ① 일반적인 문제
    - ② 특수한 문제
    - ③ 대학유형의 상위성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점
2. 귀 결
  - 1) 분석과 평가
  - 2) 기 회
3. 대응방안
  - 1) 개혁의 핵심목표
  - 2) 개별적인 개혁조치[이하 제 103호(2000. 1.2원호개재 예정)]
    - ① 대학구조의 발전
    - ② 대학교육구조의 개혁
    - ③ 대학입학
    - ④ 대학재정
    - ⑤ 대학의 전략적 역량강화: 총장책임과 대학경영의 강화
    - ⑥ 인사의 자율성
    - ⑦ 수업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 ⑧ 연구의 집중화와 결과물의 이용
    - ⑨ 보완과 자극으로서의 사립대학
4. 전 망

## 1. 대학현황과 문제제기

### 1) 세계의 변모

지구상의 이용 가능한 지식의 양은 매 5년에서 7년마다 곱절로 늘어나고 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약 25,000건의 학술적인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지식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수명이 짧은 '자원'(Rohstoff)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획기적 전환의 중요한 모습이다. 독일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von einer Industrie- zu einer Wissensgesellschaft) 전이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정보라고 하는 자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Wirtschaften)의 유형과 방식 자체도 새로운 기회, 집중하는 환경부담 그리고 위협적인 자원고갈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배분, 지식의 효과적인 변환 그리고 특히 지식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정보 및 지식사회는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를 필요로 하고 가능하게 해준다. 동시에 이는 새로운 교육내용과 새로운 전달능력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매체에

\* 역자주: 이 글(원제: "Hochschulen für das 21. Jahrhundert")은 Kohl 정권의 연방교육부장관(Bundesminister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Rüttgers박사가 21세기를 앞두고 독일 고등교육의 과거,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개관한 것이다. 1998. 10. 27. 정권교체가 있었지만(현 장관은 Edelgard Bulmahn, SPD) 고등교육정책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대학자치의 명분으로 외부의 관여를 거부해왔으나, 대학은 이제 국가경쟁력 내지 국제경쟁력의 요청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을 고유의 과거 유산을 일거에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지 독일인들의 고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한국의 대학 교육 문제해결과 전망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출처: <http://www.bmbf.de/deutsch/veroeff/dokus/hochschul.htm>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세계를 접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새로운 갈등적 대결도 존재한다. 전달능력은 컴퓨터의 조작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것은 매체활용상 합법성의 충족만이 아니라 사고와 판단에 있어서 독창성을 요구하는 정보와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내용물을 다루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경제의 변화-특히 아시아-태평양권 그리고 중부 및 동부유럽에서의 기술집약적 '팽창국가'(Schwellenländer)의 성장 역동성, 시장의 투명성과 통합, 기업의 세계화 그리고 지식의 급증하는 유동성 등-는 직접적으로 독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병행하여 교육경쟁력의 현 위치가 문제된다. 그 속에서 독일은 설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2) 대학의 역할과 과제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 매김되는 학문과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적이거나 발전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것은 연구와 교수라는 동시적인 임무이다. 대학은 연구, 교육 그리고 학문후세대의 양성(대학교수와 기타 연구자)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은 수많은 고도의 질적 수준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위한 학문적인 지식과 방법의 중요한 전달자이다. 대학은 또한 수출국가로 간주되는 독일의 교육과 연구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 심화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① 독일에서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근본이며 하나의 제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결합시킨다:

- 대학에서 연구는 문제제기와 학문적인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전문분야의 학제적인 연계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준다.
- 다음 세대의 끊임없는 대결을 통하여 대학의 연구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연구 자세대의 문제제기의 압력과 연구열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

다; 이는 새롭고 아직 정태화되지 않은 문제제기와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 수많은 분야, 예를 들어 정신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기초연구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학은 중요한 전문적인 연구수행기관이다.
- 기초연구의 수행기관으로서 대학은 끊임없는 쇄신과 지속적 발전 그리고 지식의 획득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임무에는 적용영역과 관련된 연구, 즉 지식과 연구결과의 실무로의 전이도 포함된다. 이를 통하여 대학은 경제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② 대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지식기반교육(die wissenschaftsbasierte Ausbildung)은 그 이수자에게 복잡한 일상생활과 직업세계에 적응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학은 사회와 경제의 지도적인 과제를 위하여 점증하는 젊은 세대의 대다수를 교육한다. 대학은 국가의 관리 법규에 근거하여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최저수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모든 대학은 국제적 기준에 충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는 점도 독일 대학시스템의 검증된 강점이다.
- 연구와 교수의 동일성은 근본적으로는 과거 독일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모범이 되어 교육의 장으로서 효용가치가 많은 것으로 만든 훔볼트의 이상에 근거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이러한 이상은 그러나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오늘날의 조건에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재교육과 현대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식의 구체화와 확산도 모든 대학의 임무 중의 하나에 속한다.
- 학습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의 점증하는 성공적인 협력(교육내용과 교육장소의 연계라는 관점)과 지식의 전이를 통해서 경제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형

성한다.

③ 대학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영역에서 관점형성, 동기부여 그리고 장차 지도력의 발휘행태에 영향을 준다. 대학은 또한 복잡하고 국제화된 조직에서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각종 문제를 둘러싼 지적인 토론의 중심적인 장이며, 목표지향적 논쟁의 선도자 그리고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이다. 대학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그러면서도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를 조망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한 대학에 대하여 고도의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회는 마찬가지로 대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3)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논점

#### ① 일반적인 문제

대학은 수년 전부터 불충분한 인적·물적 여건 속에서 도 점증하는 입학생과 재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괄목할만한 학술적, 대학운영상의 업적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학교육의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비판들이 있다:

- 첫번째 직무수행능력을 구비한 졸업생의 평균적인 수학기간이 너무 길다: 종합대학(Universität)은 7년 이상, 전문대학(Fachhochschule)은 5년 이상
- 특히 종합대학의 경우에 학습조직과 평가조직이 최적의 상황이 아니다. 지도, 원호, 학사안내 등에서, 특히 대학생활의 첫번째 단계에서 불충분하다.
- 학업중단율이 지나치게 높아, 전반적으로 약 25%를 상회하며, 종합대학의 경우 전문대학보다 월등하게 높다.
-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조사결과에서 두 명 중 한 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진술 내용은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세계상황에 뒤떨어져 있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학업중단자의 약 3분의 2는 학생원호와 학습기관 및 평가기관과 같은 학업여건을 비판하였다.
- 제 2차대전후 다른 많은 나라의 대학제도는 영미의 모델에 따라 수처에 걸쳐서 내용 및 시간적으로 명료하게 정비된 '학사' (Bachelor), '석사' (Master), '박사' (PhD)의 순으로 정비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지배적인 모델이다. 너무 늦게 정비된 첫번째 독일의 졸업제도(디플롬(Diplom)와 박사(Doktor))는 이러한 학업시스템과 잘 호환되지 않는다.
- 독일 대학은 대다수가 '학점이전시스템' (Credit Transfer System)(학점에 따른 부분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수한 단위 학업결과를 별 문제 없이 인정받는다)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고 외국을 포함한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습 및 시험결과의 인정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다.
- 종합대학의 경우 학업의 실무 및 직업관련성이 불충분하며, 아직도 연구설비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시험에 관계되는 적절한 학습내용으로서 첫번째 졸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내용으로부터 제도적인 부담경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 교육과 연구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이에 기초한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절차는 독일 대학에서는 - 다른 유럽국가에서 이미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 아직 초보단계이다.
- 대학의 운영 및 경영체제는 오늘날 이러한 거대한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학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전통적인 위원회 구조는 현대적인 경영체제의 도입과 결과지향적 효율성 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대학에 대한 예산배정은 업무수행능력에 기초한 기

준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 대학은 전통적인 국가예산체계(중상주의시대의 재정학)로 인한 복잡한 압박으로 인하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예산 및 인사관리의 개별 단위는 허가가 유보되어 있거나 세밀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특수한 문제: 독일의 국제경쟁력과 대학교육의 매력은 위험에 처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국제적인 과학공동체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고 외국의 엘리트들과 교류를 하는 수출국가이자 지식국가로서 여겨진다. 이러한 부류에서 한번 탈락하면 그것이 고착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체된 후에야 회복이 가능하다:

- 독일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은 너무 적다. 특히 지난 20년간 극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지역 출신자로서 오늘날 독일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전체 학생수와 그곳의 외국인 학생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였다.
-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춘 대학교육을 위하여 독일어를 배워야 하는 불가피성은 하나의 장애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작업언어(Welt-Arbeitsprache)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이들 학생들에 대한 외국인관련법규상의 장애와 주거나 재정지원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도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하나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인 3가지 문제가 있다:

- 종합대학에서 첫번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졸업을 위한 평균적인 대학수업연한이 7.1년이나 되는 점은 분명히 장애요소이다. 이 기간이면 영미식 제도를 따

르는 대학에서는 어려움 없이 학사와 석사를 마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대학에서의 학업에는 수업료가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학업지체에 기여하고 있다.

- 훔볼트 이래로 산업화된 국가나 개발도상국가를 방문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제도는 영미의 모델을 따라 - 그 나라의 고유한 졸업제도를 포함하여 - 발전되어 왔다: 이들은 그 사이에 독일의 대학제도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다.
- 외국의 많은 대학은 의무적이고 투명한 '학점이전제도'(Credit Transfer System)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학생으로서 독일 대학에서 받은 수업과 평가는 자기 모국의 시스템에서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독일 대학이 교육과정, 수학교건 및 수여학위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국제적인 기준을 지향하고 외국의 지배적인 제도에 개방하고 거기에 근접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을 일찍 시작하여 성공을 거둘수록, 확대된 체제에서 검증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진다.

③ 대학유형의 상위성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점

지난 25년 동안의 두 가지 중요한 대학유형-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언제나 완벽한 제도일 수 없으며, 많은 관점에서 실무적인 일은 부분 내지 측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관계없이 장차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원칙적으로 대학교수의 급료에 있어서 현존하는 차이가 전문대학에서 중요한 교수직이 채워지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C3급에 속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 전문대학은 응용적인 연구와 개발 과제의 추진을 위한 재정상황이 충분치 못하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언제나 특별재원(연방, 주 및 경제계로부터의)으로 충당되어서는 안 된다.
-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일부 주(州)의 법에서는 이미

정착된 특별히 우수한 전문대학졸업자에 대한 박사 학위수여 가능성은 일관되지 못하게 다시 바뀌었다.

- 종합대학졸업자와 비교하여 전문대학졸업자가 낮은 등급으로 공무원직에 채용되는 것은 점차 전문대학의 매력을 잃게 하는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대학졸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외국인이건 독일인이건- 학사학위(Bachelor Grad)가 고위직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디플롬(Fachhochschuldiplom)(최소 4년의 학업수료)의 경우 (아직) 그렇지 못한 점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국내에서 전문대학의 강한 매력 그리고 외국에서 고등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모델기능을 고려하면 전문대학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극복되어야 한다.

## 2. 귀 결

### 1) 분석과 평가

독일의 대학제도는 능력기준에 따라 효율성, 경쟁 그리고 자기조정이라는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개혁되어야 한다.

여기에 첫번째 졸업까지의 단기간의 수학연한, 학업성취도의 인정과 졸업등급에 대한 국제적 호환성 등의 관점에서 보다 상호 근접해가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 전개라는 중요한 요인이 덧붙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적용은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대학이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해야 한다. 국가의 입법조치는 학생, 양질의 교직원, 재원 그리고 능력의 인정 등을 둘러싼 경쟁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자극해야 한다.

70년대의 '단기교과과정'(Kurzstudiengänge)이라는 모토하에 오랜 시간이었으면서도, 소득 없이 진행되었으

며, 세롭고 국가가 명하여 '단숨에'(auf einen Schlag) 도입되어야 한다는 전체시스템에 관한 논쟁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 2) 기 회

그러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기는 적절하다:

첫째, 효율성, 신속성 그리고 '조직감량'(Schlankheit)과 관련하여 그 체계, 내용 및 절차 등을 점검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목도할 수 있는 경향이다: 이것은 결코 대학분야만의 현상이 아니며 대학에만 부과된 특별한 요청도 아니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이다.

둘째, 대학영역에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특별한 상황이 주어져 있다. 왜곡된 인력구조로 인하여 2005년까지 현재 대학교수의 약 50%가 연령조건 때문에 대학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경쟁체계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세롭고, 강하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게 정비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대응방안

### 1) 개혁의 핵심목표

대학은 과거의 틀 속에서 미래의 과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오늘날의 '대중대학'(Massenuniversität)은 새로운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훔볼트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대학과 오늘날의 대학간의 차이는 더 이상 단계적인 등급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로서 교육팽창의 결과이다. 양은 극적으로 증가한 반면, 질은 결과적으로 별다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다. 강한 경쟁력, 고도의 신속성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의 추구가 대학개혁의 중심적 구성부분이 되어야 한다. 대학 자체로부터 나오는 심사숙고, 주도적

노력 그리고 권고안 등이 개혁 추진과정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대학과 대립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대학과 함께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만 현실적인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독일 대학제도개혁의 목표는 탈규제화, 능력지향 그리고 능력을 자극하는 체제구축을 통하여 경쟁력과 다양화를 기능하게 하고 21세기에 대비한 독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다:

- 능력지향적인 대학내부의 자원배분이라는 기본원칙의 도입의 관점에서 대학총장의 권한 강화를 통한 대학경영의 능력지향적 재정지원과 신속성에 기반한 국가 예산배정의 조정을 통한 대학재정의 개혁;
- 교수채용조건을 수정과 능력을 자극하는 체제구축과 관련지은 대학의 지속적인 인사자치제의 도입;
- 대학의 참여를 통한 대학입학, 입학정원제(numerus clausus) 전공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선발, 그리고 관례적인 대학입학자격에 관계없이 직업적 소양의 수준에 따라 대학입학을 개방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제도 보완;
- 전문대학의 강화를 통한 대학 및 학습구조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대학시스템이 명료하게 정의된 학습기간에 분명히 장래 직업을 지향하는 졸업을 할 수 있는 단계적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학습구조개혁을 집약화하며, 대학에게 새로운 대학교육형식(이중적 교과과정, 통합된 출석 및 원격리수업, 국제적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성적증명과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점제도(개별적인 학업성취도의 인증)를 포함하는 중간시험제

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졸업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대학의 관계는 관료적 길들이기를 통해서 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연구와 교수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인력개발, 예산집행, 경쟁적인 중점교육 등-은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의 대학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분명한 지향점을 필요로 한다. 대학은 연구와 교수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동시에 직업체계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목표지향적으로 직장생활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학문적이어야 하고, 이는 전문분야 및 간학문적 연구의 핵심요소이고 동인이다: 대학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러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은 경제적이어야 하고, 수월성과 효과성을 상호연계시켜야 한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후계자양성에 있어서와 같이 교수와 학습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관련입법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개혁추진이 지원되어야 한다. 함께 성장하는 유럽에서 필요한 전국가적인 영역의 확보는 연방과 주의 공동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연방과 주는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127**

**김병주**

국민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고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공저), 가정폭력과 경찰역할' 등이 있다.